

북한 사금융의 발전, 영향 및 전망*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peter@kyungnam.ac.kr

I. 서론

지난 4년간 김정은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시장화, 나아가 실질적 사유화가 많이 진전되어 왔음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그런데 이 시장화와 사유화는 사금융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시장화나 사유화의 진전은 사금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역할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날 북한에서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이며 동시에 사적 금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금융 거래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사금융은 개인은 물론, 사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다. ‘돈주’라고 하는 신흥부유층은 사적 재산을 토대로 국유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북한의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유기업과 돈주들과의 민관 파트너십은 자본주의의 그것을 그대로 닮았다. 지난 4년간 김정은 정권의 상징적인 개혁조치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사금융을 더욱 확장시켰고, 돈주들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했다.

이런 사금융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북한 은행이 국가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개인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당국에 의한 민간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간섭의 우려로 인하여 사적 자본이 지하경제로 퇴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 이 글은 필자의 학술논문인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2015년 상반기, 제27권 제1호, 통권 제63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5. 6, pp.205-242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하다. 고리대금업과 같은 서민 착취형 사금융 등이 갈수록 성행하자 북한 당국도 단속과 더불어 지난 2006년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설립 추진 등 금융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금융의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소비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유통,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돈주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경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전환 초기나 경제개발 초기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사금융의 공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융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개혁은 대부분 체제 전환국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면 체제 이행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북한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는 경제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 과정에서 경험한 귀족들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금융의 발생 원인이나,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투자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등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공통적 현상이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 기회가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내 확산되고 있는 사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금융이 북한의 최근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된다.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적 문제점 등이 총망라되어 장마당과 사금융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사금융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사회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사경제는 물론 경제성장, 나아가 경제체제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한 이후 역대 최강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 북한 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제재 이전까지 드러난 현상과 사례를 중심으로 사금융의 다양한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금융의 개념과 사금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인 돈주에 대한 실체를 검토한 뒤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요인들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금융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한다.

사금융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비롯해 북한의 공식문건, 탈북자 면담결과, 북한 전문매체의 보도 가운데 사금융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선별적으로 참조하였다. 사금융만을 다룬 선행 연구가 거의 없지만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존 자료와 정보의 재구성을 통한 경험적 논증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북한 내 사금융 실태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도 이 글에 폭넓게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사금융의 개념과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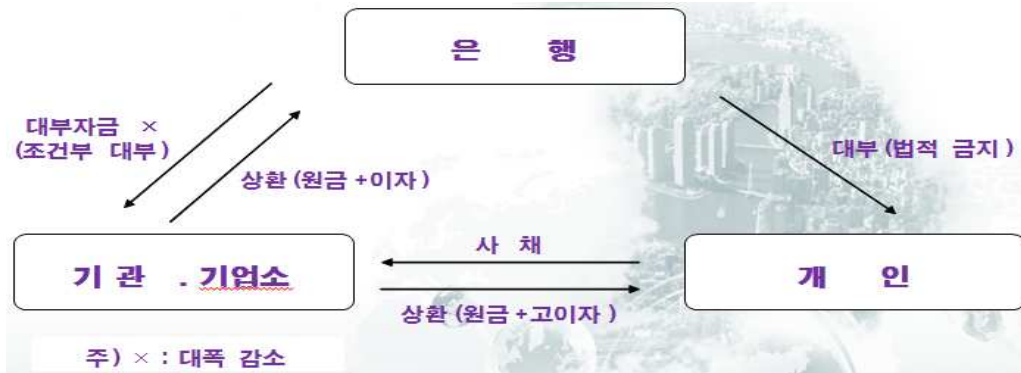
1. 개념

사금융은 공인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자를 포함한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사금융을 협의로 해석하면 주로 전문적인 사채업자에 의해 자금의 공급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 즉 자금의 과소공급과 과대 투자, 그리고 과다 소비수요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원래 북한의 금융제도하에서 일반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민 간 금전거래는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농민의 경우에는 농촌금융을 담당하는 ‘협동농장신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¹⁾ 물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북한 민법 제225조). 이들은 빌린 자금을 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북한 민법 제226조). 대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비율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북한 민법 제229조).

1)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년 제3호, 2002, pp.13.

[그림 1] 은행의 기관·기업소와 개인 간의 대부 관계



자료: 김영희, 「북한의 체신기관 및 금융서비스 운영현황」,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2015. 10. 16, p.11.

북한에서는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만을 금융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관·기업소 또는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은행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주민 간의 금전거래는 법적 조치에 의해 허용되었다. 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 보충된 민법 제221조에 따르면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 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이하 ‘대출’) 계약’에 따라 할 수 있다.²⁾ 하지만 이자 또는 이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대출계약은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제222조). 공민은 꾸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 하고,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민법 제224조).

개인 간 금융거래에서는 이자를 허용하지 않으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정과 달리 개인 간 금융거래에서 고리대가 성행하고 있음은 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 보충된 북한의 형법 제118조 ‘고리대죄’ 신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³⁾ 이처럼 북한에서 사금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사채업자에 의한 고리대금업의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은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개인과 회사, 협동기관, 심지어 국가기관 간에도 이뤄진다. 북한 당국은 독립채산제 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은행의 대부자금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기업을 비롯한

2) 장영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1, p.307.

3) 이 조항에 따르면 고리대를 하여 대량의 이익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 위의 책, p.190.

각 생산주체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사금융의 주체

사금융시장은 오늘날 북한에서 ‘신흥부유층’으로 알려진 돈주 또는 전주(錢主)에 의해 운영된다. 사금융의 주체인 돈주들은 단순한 대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경영자 및 자본가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

원래 북한에서의 사금융은 개인과 개인 간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개인과 기업·협동단체·국가기관 간의 금융거래로 발전했다. 오늘날 북한에서 유통, 생산, 사금융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장이 생겨나고, 국가의 제품들을 파는 국영백화점과 상점들은 개인 돈주들의 투자성 자금으로 물품들을 중국에서 유통하여 판매한다. 국가의 명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⁴⁾ 원자재 공급을 위해서 중국과 합작 투자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임가공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돈주들 간의 합작 투자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돈주들은 국영 공장기업소를 임대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⁵⁾

국영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경제주체들로부터 불신을 받다보니 은행을 대행하는 주체들도 등장했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돈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금융의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한 것이다. 돈주들은 오늘날 북한의 사금융을 발전시키는 핵심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사금융 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탐구 대상은 사금융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돈주’들이다. 돈주들의 범위를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좁게 보면 ‘돈주’는 자본의 투자와 고용을 통해 자본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북한에서는 개인자산의 보유규모가 은폐되어 있어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돈주’를 규정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⁶⁾ 외화재산 보유자들을 돈주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로 상업적 이윤 추구를 통해 화폐재산의 증식을 추구하는 ‘사민’ 신분의 시장 참가주체이다.⁷⁾

돈주들은 대체로 여유돈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서, 재일교포, 화교를 비롯해

4) 곽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p.61.
5) 곽인옥, 위의 글, p.61.
6)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2호, 2008, p.59.
7)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제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014 상반기(제26권 제1호, 통권 제61호), p.169.

무역 및 외화벌이 일꾼, 마약장사꾼, 밀수꾼, 당 간부 부인 등 출신성분과 직업이 다양하다. 주로 외화벌이 기관에서 돈을 벌었거나 러시아 별목공으로 가서 돈을 벌었거나 해외 가족 및 친인척의 송금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주민들(재일교포, 화교, 남한탈북자 가족)이 돈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특수단위들의 ‘보호’하에 이 단위들의 시장활동 ‘대리인’ 자격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외화벌이 원천의 채취·가공 및 수출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가하는 ‘외화벌이 종사자’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특수단위 무역회사들이 수출 대치물자 등으로 수입한 소비재 상품들을 비공식적으로 대량구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장·기업소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해서 인수한 생산품의 판매에 관계하는 일종의 ‘주문생산형’ 상인들도 있다. 이처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화(달러) 기반의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외화벌이 종사자나 상인들은 비국가부문에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는 유력한 집단을 구성한다.⁸⁾

이들은 막강한 현금 동원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사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른바 현대판 ‘지주’로 불리는 북한의 돈 많은 장사꾼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은 북한에서 거액의 돈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현금 유통을 가장 많이 하는 환전상들과 외화벌이 상점 지배인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돈주의 유형을 외화벌이 돈주, 종합시장 돈주, 건설업 돈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⁹⁾ 지금은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돈주들의 범위와 활동 영역이 기존의 구분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II.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다. 비공식적 시장활동이 시작된 초기부터 이후 시장을 합법화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강화,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 사금융 활성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는 북한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압도적인 외화 선호 현상과 더불어 사금융시장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계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014 상반기(제26권 제1호, 통권 제61호), p.169.

9) 김익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pp.34~40.

1.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북한경제가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던 시기에는 금융의 역할이 국가의 계획을 뒷받침하여 생산과 분배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기관·기업소의 생산이 급감하면서 북한의 금융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배급을 대체하게 된 시장 중심의 사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 금융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생산이 이뤄지도록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국영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했고, 가게는 소비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계획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생겼고, 이 공간을 시장이 메우기 시작했는데,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금융 시장이 공적 금융기관 기능의 일부를 떠맡게 된 것이다.

결국 사금융이 형성되고 활성화된 것은 국가가 자금을 유통하는 공적 금융기능을 상실한 탓이다. 심지어 기업, 협동농장 등 단체까지 돈 많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 국영기업에는 돈이 없고, 개인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5~2002년 기간 중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재정규모 축소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공장, 기업소 등이 생존을 위해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었다.

2. 시장경제 요소를 강화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진화

시장경제요소를 강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진화와 사금융의 발전간에는 연관성이 깊다.¹⁰⁾ 많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 결과, 북한에서 사금융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 중반, 보다 구체적으로 1995년 전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990년 중반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 혹은 이완되면서 사경제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장사를 하거나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¹¹⁾ 1994년 김일성

10)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외화 및 원유,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량 부족과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암시장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계획과 공급시스템에 기반을 둔 북한의 사회주의 가격제정 원칙과 국정가격으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국가의 재정적 통제와 자원배분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당·경제기관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2년 7월 1일자로 가격과 임금 인상 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0년 뒤 김정은 정권의 출범 첫 해인 2012년 6월 28일 6·28 방침으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따라 일부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독자경영이 시범운영되어 왔다. 기업이나 농장 등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온 6·28 방침은 2015년 5월 30일 북한 전역의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5·30 조치’로 이어졌다.

주석 사망 이후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개인 장사, 장마당, 밀수 등이 늘어나면서 인민들의 사채(이자돈), 외환 등 사금융 관련 활동이 시작되었다.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 받고 있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공간의 확산 현상과 함께 개인영업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적 자본가들의 활동공간도 확대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과거에 농수산물 판매만을 허락하던 북한 당국은 2003년 5월, 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내각결정 27호에 따라 종합시장 운영을 합법화하여 공산품의 판매도 승인했다.¹²⁾ 2002년 7·1 조치나 2003년 3월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내각조치 제24호에 의해 시장은 공식적인 국가경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에 북한정부는 생산과 유통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변화된 계획경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사적 자본을 축적한 ‘돈주(錢主)’들로 하여금 투자성 자금을 활용해 수익성이 보다 높은 곳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¹³⁾

개인 간 고리대금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¹⁴⁾ 7·1 조치 이후부터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순천 등지에서 외화벌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돈주들이 속출했고, 이들은 개인 대부뿐 아니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주택거래 등에도 참여하였다. 뇌물을 주고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땅을 구입한 후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후 비싼 가격에 파는 집장사를 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 증식 현상도 나타났다.¹⁵⁾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로 무역회사를 개설하고 밀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돈주와 기업소 그리고 권력기관들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공생관계를 만들면서 공식, 비공식적 이익 공유 커넥션을 형성했다.¹⁶⁾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직후 북한에서 자금력을 갖춘 돈주들이 나타나 사채업에 이어 유통업까지 진출한 사례는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 발행한 「오늘의 북한소식」을 통해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다.¹⁷⁾ 장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개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장사 밀전을 빌려주는 ‘돈주’가 생겨 이자가 월 3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장마당 혹은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북한돈으로 5~10만원의 종잣돈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 10만원을 빌리면 3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1)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년 제3호, 2002, pp.13.

12) 발송 연월일: 주체 92(2003)년 5월 8일, 회수기일: 주체 94(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6쪽 분량의 본 문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시장관리규정(잠정)을 채택한다. 2. 상업성, 도, 시, 군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3. 주체88(1999)년 3월 13일 내각결정 23호 농민시장운영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없앤다.”

13) 권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p.57.

14) 김영수 외,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상 변화와 체제의 작동원리 분석」,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6. 11. 10, pp.51~57.

15) 위 보고서, pp.76~77.

16) 위 보고서, p.80.

17)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4. 11. 16.

있다는 것이다. 돈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한 주민들은 돈주나 그의 대리인(중간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매상 역할을 해주고 판매 이윤을 나눠 가졌다.

3.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사적 자본의 축적 가능성 증대

사금융은 사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금융의 축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된다.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적 자본은 재투자되어 부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사적 자본의 축적은 사적 소유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도 자영업자들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창업 열풍이 불 정도로 신종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자연스레 경쟁도 이전과 달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점차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가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성장하면서 사적 자본 활용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도적으로 독립채산제나 반독립채산제, 그리고 최근의 자율경영체제의 영향을 받는 기관, 기업소가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심화되었다. 현금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사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개인영업은 2004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¹⁸⁾ 초기에는 돈이 많은 개인이 직접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했으나, 점차 사금융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영업 행위자와 투자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영업의 종류로는 식당을 비롯해 오락실을 겸한 컴퓨터 상점, 비디오관람방, 목욕탕, 안마소, 당구장, 노래방 등 주로 서비스 업종들이다. 역시 돈주들이 주도하는 물류운송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차(트럭)와 버스가 중심이던 북한의 물류운송 사업이 최근에는 열차와 선박까지 동원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¹⁹⁾

북한에서는 법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이처럼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실질적인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폭 넓게 진행되고 왔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북한에서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농업, 수산업, 광업, 나아가 제조업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유화 실태를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런 움직임들의 이면에는 사금융이 뒷받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18) 평화재단, 『북한사회의 이해와 주민들의 생활』, 2006, pp.28~29.

19) 『데일리연케이』, 2015. 2. 5.

20) 북한에서의 사유화 실태에 대해서는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향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사적 자본 투입에 의해 제조업 분야 국영기업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pp.202~229 등 참조.

4.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사적 경제활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적 자본을 투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점도 사금융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원리가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적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의 투자성향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겉은 멀쩡한 사회주의지만, 내부에는 시장원리가 정착되어 ‘돈이 돈을 낳는’ 사채시장이 형성됐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채돈을 빌린 사람들도 이를 단기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기업종에 다시 투자하는 경우다.²¹⁾ 최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른바 ‘돈장사’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돈장사를 통해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주민들은 무려 50%에 달했다. 이는 외화벌이(40.6%), 되거리 장사(30.6%)보다 앞서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비롯해 현재의 실태를 보면 신흥부유층들이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본을 투자해 확대 재생산하는 특징은 거의 비슷하다.²²⁾ 예를 들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자본을 축적해 온 신흥부유층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화벌이 기지의 명의를 빌려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건설현장에 자본을 투자하는 등 투자영역을 다양화하고,²³⁾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대표적인 투기 현상은 주택시장이다. 주택시장에선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분양 등 자본주의적 경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선 개인의 주택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용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당 간부는 10만달러(약 1억여 원)가 넘는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가 하면, 기관·기업소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투기나 자녀 증여를 위한 암거래나 변칙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²⁴⁾ ‘석탄기지’라고 해서 소규모 시장 경제식으로 갱도를 운영하는 사적 기업도 많아졌다. ‘석탄기지’는 신흥 돈주와 권력 계층 주변의 사람들이 군과 당 등 권력기구 산하 회사의 간판을 빌려 설립하고 국영 석탄광산의 채탄과 운반을 하청 받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직접 돈주들이 투자해 시장 경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1)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에 잠시 체류 중인 남포시 거주자 한 화교와의 인터뷰」, 2014. 11. 20.

22)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p.18.

23)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2008년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학교 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발표문, 2008. pp.40~43.

24) 『조선일보』, 2014. 2. 11.

5.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의 심화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가 거래를 대체하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달러화 현상(dol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위안화가 보편 화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현상(yuanization)이라고도 부른다. 북한 돈이 시장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화가 은행 저축을 대신하여 화폐가치를 보존하는 금융자산으로 평가 받고, 나아가 교환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사금융의 발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²⁵⁾ 북한 일반 주민들도 장마당에서 외화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현금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외화의 유통 활성화와 축적 현상이 사금융 시장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적 외환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돈주들은 더 많은 사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들은 우선 외화거래가 많은 외화별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환율변동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국경지역의 정보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상업 활동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사례도 많았다. 오늘날 불법 외환시장은 개인뿐 아니라 상당한 자본과 인력을 갖춘 조직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접경지역 정보망을 이용해 국제 환시세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파악하여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환차익을 얻기도 한다.

IV. 사금융 확산의 의미와 영향

1. 의미와 영향

북한 내 사금융의 발전 및 기업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및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전문 매체들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사적 자본을 가진 다양한 돈주의 등장과 이들의 공격적인 투자활동은 이제 북한에서도 개인도 사적 소유에 관한 재산권 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돈주들은 개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조직화(분업화), 기업화(대형

²⁵⁾ Calvo, G. A., *Money, Exchange Rates, and Output*, MIT Press, 1996. pp.153-154. Calvo에 따르면,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는 외화가 '계산단위, 교환수단, 특히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국내 화폐가 여전히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²⁶⁾ 이른바 돈주들을 중심으로 붉은 자본가의 맹아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붉은 자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본가와 유사하지만, 다만 공산당의 통치 아래에서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붉은 자본가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규율하는 틀 안에서 운영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고, 국가소유 자산에 대한 이용권을 통해 자본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 틀 안에서 보면 북한에도 이미 붉은 자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심화는 북한 당국에게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 것이다. 원래 중앙계획경제 아래에서는 금융은 없고, 재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국유은행은 단순한 재정 출납기관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융개혁이 진행되면 은행은 점차 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금과 대출까지 담당하게 된다. 즉, 경제체제 개혁 → 재정과 금융의 분리 → 금융 발전 → 금융개혁이라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부분적 경제체제 개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금융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금융제도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북한 정부는 제한적으로 사금융을 공적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또한 사금융의 발달은 북한사회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한 획득적 지위를 중요시하던 북한사회를 바꿔 놓을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자본력과 시장적응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적 지위가 이전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돈주의 등장과 성장은 신분과 계층의 분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적응 능력과 소유한 사회적 자본, 즉 시장활용 능력을 비롯해 정보공유 능력, 당, 보위 간부 등 정치권력과의 네트워크 능력 등에 따라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6) 권인욱,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p.66.

27) 이영훈, 「최근 북한 화폐금융의 문제점 검토 및 금융조치 평가」,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오늘의 북한학, 한반도 통일을 말한다』, 2015. 10. 13. p.151.

북한 당국은 노동당원이 나라의 중심계층이라고 선전하지만, 주민들 속에선 장마당의 돈주들이 북한을 유지하는 기본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²⁸⁾ 시장의 발달은 ‘돈주’라 불리는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하였고, 이는 북한의 충성도와 성분에 기반한 계층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5~1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資産家)가 24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015년 기준). 최고 자산가 중에는 중앙당 간부나 외교관, 외화벌이 상사원, 시장에서 돈을 번 ‘돈주’ 등이 많다.²⁹⁾ 오늘날 북한에서 경제력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돈주 등 사금융 주도 세력들의 위상도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금융 거래는 사유재산권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사금융활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공식화,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금융 활동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돈주’들은 기존의 계층적 기반보다는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신분만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층부에 속하는 계층에 비해 신분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더구나 각종 불법활동 또는 비사회주의적 영리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력층에 의존해야 한다.

‘돈주’는 내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위로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간부계층과의 결탁을 점차 강화해 나가면서 세력을 키우고, 아래로는 노동자계층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자본을 증식시키고 있다. 즉,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돈주’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의 격차는 점차 좁아지고 유착된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중간층을 이루었던 노동자계층과 ‘돈주’와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금융의 발달은 정보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는 곧 돈이자, 자본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최근에는 휴대폰이 확산되면서 정보유통이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 못지 않게 경제주체들 간의 정보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정보와 자본증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성공한 돈주들이 변화하는 정치, 경제,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바로 정보력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정보력의 차이가 돈주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속 정보에는 지역별 시장정보, 환율 변화동향, 단속 정보, 시장수요의 변화, 인맥 관련 정보 등 매우 다양했다. 휴대전화 덕분에 돈주들은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가격과 환율을 포함한 시장정보

28) 『자유아시아방송』, 「북 사회 중심계층은 돈주들」, 2016. 2. 11.

29) 『조선일보』, 2014. 2. 11.

를 교환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통신 수단을 갖게 되었다.

한편, 사금융의 발달은 신용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도 사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신용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다. 적지 않은 돈주들을 인터뷰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신용은 돈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핵심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마디로 신용이 없으면 돈주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신용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확장시켜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³⁰⁾ 신용을 중시하고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데도 신용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신용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간부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피고용 노동자 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돈주'들은 대체로 신용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하는 등의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몸에 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³¹⁾ 지금의 북한에서 현재 '돈주'가 된 이들은 대부분 이런 조건들을 일찍부터 습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적절히 활용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양질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확보이다. 적지 않은 돈주들은 사금융 거래에 따른 법적 보호와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단속과 통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식제도의 공백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사금융 주체를 중심으로 간부 권력층, 일반 노동자, 그리고 같은 동종 업자들 간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대개 정치적 신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권력층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자신의 신변 보호를 비롯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나아가 자본증식의 기회 포착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층은 주로 북한에서 사법, 검찰, 보위업무를 담당하는 일꾼들을 지칭한다. 권력층과의 관계 형성과 발전은 주로 뇌물을 수단으로 이뤄지지만, 나중에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발전되기도 한다.

한편, 사금융의 확산은 북한 사회 내 빈부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다. 시장 확대로 나타난 오늘날 북한의 가장 큰 숙제는 빈부차이인지도 모른다. 시장적응 능력과 더불어 사금융 활용 능력의 보유 여부가 잘사는 주민과 그렇지 않는 주민 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돈주들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 및 이에 따른 독과점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는 경향이

30) 조경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p.272.

31) 위의 글, p.38.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자본과 인맥, 시장능력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자본을 활용한 독과점과 매점매석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안기는 폐해도 남기고 있는 것이다.

V. 결론과 전망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전환 초기나 경제개발 초기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사금융의 확대 발전은 필연적으로 금융개혁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통상 금융개혁은 대부분 체제 전환국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의 사금융 현상은 주요한 관찰과 연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금융의 다양한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돈주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금융의 활성화는 북한경제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 과정에서 경험한 궤적들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금융의 발생 원인이나,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투자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등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공통적 현상이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 기회가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와서 사금융과 돈주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북한 당국은 이제 단순히 시장 통제 수준에서 사금융과 돈주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이 사적 경제활동을 억제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금융을 적절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사적 금융을 공적 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 소유의 외화를 합법적, 제도적으로 환수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더구나 핵실험과 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사금융시장의 활용 유혹을 더욱 느끼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재에

다른 외화유입의 축소 등이 오히려 내부 자금유시장에서의 외화조달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불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상당수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3월 19일 연방관보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특정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했다. 이같은 다자, 양자간 대북제재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북한의 수출과 김정은 통치자금에 상당한 타격을 줄 듯하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부과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제재 아래에서도 북한경제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물론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는 범위와 강도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제재의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외화 수입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외국 관광객 유치 등에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재정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오는 5월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의 비전과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할 물자와 자금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핵실험과 제재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당분간 개방의 진전과 외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현 단계에서 경제적 성과는 내자동원에 달려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 단계 북한경제의 주된 과제는 국내 자금의 최대한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자금유시장에서 국정 운영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각종 기관들도 자금유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영희, 「북한의 체신기관 및 금융서비스 운영현황」,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2015. 10. 16.
- 김영수 외,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상 변화와 체제의 작동원리 분석」,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6. 11. 10.
-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2008년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발표문, 2008.
-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 곽인욱,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 『데일리엔케이』, 2015. 2. 5.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년 제3호, 2002.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산업연구원, 2010.
- 이영훈, 「최근 북한 화폐금융의 문제점 검토 및 금융조치 평가」,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오늘의 북한학, 한반도 통일을 말하다』, 2015. 10. 13.
-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2015년 상반기, 제27권 제1호, 통권 제63호, 2015. 6.
-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1.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 『조선일보』, 2014. 2. 11.
- 『자유아시아방송』, 2014. 11. 20; 2016. 2. 11.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4. 11. 16.
-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2호, 2008.
-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2014 상반기(제26권 제1호, 통권 제61호), 2014.
- 평화재단, 『북한사회의 이해와 주민들의 생활』, 2006.
- Calvo, G. A., *Money, Exchange Rates, and Output*, MIT Press, 1996.